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다음달 결론"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주요 쟁점 7개로 정리 권력구조 개편 논의 차후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종민 소위원장(가운데)이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선거제도 개혁 관련 주요 쟁점을 7개로 정리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는 쟁점 사항으로 다루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혁1소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종민 민주당 의원(정치개혁1소위 위원장)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정리된 7개 선거제 개혁 관련 주요 쟁점은 ▲의석 배분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단위/권역의 구분)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 이중등록제(중복 입후보제) ▲공천제도 개혁 등이다.

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중에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한 이후 권력구조를 논의한다는 게 여야 합의사항이라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권력구조 항목을 쟁점사항으로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목요일(20일)에 7개 항목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번 달까지 정개특위 차원의 안(案)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연내에 합의하는건 어렵다"며 "1월까지 결론을 낸다는게 간사 합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쟁점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기 싸움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 없이는 선거제 개혁 관련 논의도 진행할 수 없다고 버텼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여야 합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복잡하게 해석할 것 없이 여야 합의문은 '선(先) 선거제 개정, 후(後) 헌법개정'을 의미한다"며 "개헌을 연계시켜서 하자는 것은 결국 (선거제 개혁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봉쇄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도 "선거제도 자체의 합의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더 어려운 권력구조 논의까지 연동해 합의하자고 단서를 단다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5당 원내대표 합의와 정개특위 운영에 관해서는 권력구조 문제는 쟁점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권력구조를 빼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을 반드시 쟁점 사항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권력구조 관련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결국 소위는 두 차례의 정회를 거친 줄다리기 끝에 권력구조 개편 관련 사항을 여야 합의문 6항 그대로 '참고 사항'으로 넣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1소위는 매주 두 차례씩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 관련 쟁점에 대해 공개 자유발언에 이어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만큼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안도 1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강원랜드도 채용비리 국정조사

3당 원내수석부대표 합의…민생입법 TF 재가동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자유한국당 정양석,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만나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맡을 특별위원회의 공식 명칭을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강원랜드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를,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를 각각 요구했으나, 서로 한 발씩 물러선 것이다.

원내수석들은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당은 자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사건이 2012~2013년에 발생한 점을 고려, 2015년 이후 발생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쪽에 방점을 찍어왔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강원랜드 부분이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은 "빨리 간사단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에 착수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원내수석들은 지난 정기국회 때 결성한 민생입법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들을 집중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황주홍 평화당 의원 '입법 4관왕'

발의·처리 건수 1위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국회에서 '입법 4관왕'을 차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황 의원은 18일 현재 ▲20대 국회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1위 ▲20대 국회 대표발의 법률안 처리 건수 1위 ▲2018년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1위 ▲2018년 대표발의 법률안 처리 건수 1위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5월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에서 황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100건 이상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이 중 황 의원은 가장 많은 43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처리 건수도 황 의원은 127건으로 유일하게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올 한해를 기준으로 해서도 황 의원은 법률안 최다 발의 건수와 처리 건수를 기록했다. 황 의원은 올해 208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대표발의 법률안 중 71건을 통과시켰다. 특히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는 2위 의원과 59건의 격차가 있었고, 처리 건수는 28건의 격차를 보였다.

황 의원은 "좋은 법을 만들고, 나쁜 법을 없애거나 고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국회의원의 본령적 책임이자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성·장애인·노인·어린이·농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택시-카풀 갈등 조정 '대타협 기구' 만든다

전국택시노조 등 4개 단체와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카풀서비스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대변인,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의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18일 국회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업계의 안정과 국민의 수요자 편익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보완할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요청했고, 택시단체도 내부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해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택시단체 4곳의 대표와 카풀업계 대표, 정부 대표,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상하고 있다. 이 기구를 통해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조정해 합의안을 만들고 택시업계 지원방안 등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택시단체들 간 이해관계도 다르고 기사님들 한분 한분이 바라는 점도 다르다"며 "그렇기에 이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주체가 의견을 수렴해 결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택시 양대노조는 어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당에 제안했지만, 4개 택시단체 전체가 합의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4개 단체 모두 내부적으로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카풀 업계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택시업계 입장이고, 이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려면 카풀 업계의 참여는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월급제 도입, 감차 문제 등 택시업계 지원방안은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단체들은 카풀 서비스가 위법 소지는 없는지 민주당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김명진 평화당 지역위원장 조강특위 위원 임명

김명진 민주평화당 서구갑 지역위원장이 지난 17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민주평화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평화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6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당규에 따라 조강특위를 구성했으며 김명진 위원 등 11명을 조강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조강특위는 전국 지역위원회 실태 파악과 지역위원장 적격 여부 심사·선정을 통해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조직을 정비하게 된다.

김명진 위원장은 "신생정당의 기반조직을 구축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역량 있는 분들을 선정해 민주 평화당의 지지와 저변을 넓히고 신뢰받고 사랑받는 민주 평화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